

길재와 나와 북한

이대근*

비교적 보수적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나는 북한 문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 때문에 자주 논쟁을 했지만, 차이를 상호 존중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어느 것이 유용한가 하는 관점을 공유했다.

여야,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 간에도 그런 상호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 여야,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갈등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차이가 아니라, 차이를 다루는 방법이다.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보수 정치세력은 강경 보수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여야 간, 진보와 보수 간 차이를 좁혔다. 그럼에도 북한 문제에 관한 대립과 갈등은 여전하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은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여야가 대립하는 가장 큰 요인은 대북정책의 차이나 북한 문제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국내 정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 간 북한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대북정책이 아닌, 우발적 사건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축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대응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국내 대결 정치이다. 국내 정치적 대결을 위해 북한 문제를 동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연합의 정치, 협치를 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서 여야 공동의 대북 접근이 가능하고, 대북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보장될 것이다.

주제어: 류길재, 국가안보전략, 진보와 보수 갈등, 여야 대북정책 차이, 협치, 대결 정치

*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1. 같고도 다른 길재와 나

길재와 나는 같은 점이 많았다. 대학 같은 학과에서 만났고, 같은 학기에 복학해 함께 다녔다. 대학원에도 같은 시기에 들어가 같은 지도교수 아래 정치학을 공부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와 나 모두 전공을 한국 정치에서 북한 정치로 바꿨다. 그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몇 년 뒤 나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제주도에 며칠 간 나의 신혼 관광 안내를 맡은 택시 기사는 길재의 신혼여행 안내를 맡았던 이였다.

우리는 모두 딸을 돌씩 낳았고 각자 늦둥이도 가졌다. 첫딸을 낳고 이름 짓느라 애먹을 때였다. 이름 짓기 사전까지 들춰 가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마음에 드는 것을 꼭 집어내지 못했다. 물론 후보를 하나 정해 두기는 했다. ‘수련.’ 출생 등록 마감일이 다가왔다. 이제 미룰 수 없었다.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면 ‘수련’으로 결정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길재에게 전화했다. “너, 혹시 두 번째 딸을 낳으면 지어 주려고 생각해 둔 이름 없냐?” 느닷없이 전화를 받은 그는 잠시 생각해 보자더니 이렇게 말했다. “수련이 어때냐?”

길재와 나는 다른 점이 많았다. 그는 여러모로 보수가 분명했고, 나는 아니었다. 그는 외향적이었지만, 나는 내성적이었다. 그는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고 리더십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가는 길도 서로 달랐다. 그는 학계로, 나는 언론계로 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점점 확연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부터 그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정치 문제로 논쟁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심심하면 전화해서 내가 일하는 신문사의 지면을 두고 시비를 걸어왔고, 나 또한 그런 도발을 받겠다.

길게도 고집이 있었지만, 나도 그 못지않았다. 그는 나의 정체성을 진보라고 규정하고 나를 그렇게 대했다. 우리는 점차 상대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 사이의 논쟁은 줄어들었다. 우리의 대화는 각자 표현의 자유를 즐기는 토크 쇼로 변했다. 서로에게 지치고 또한 익숙해진 결과였다. 상대를 설득하느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그러나 선제공격과 방어, 2차 공격을 수없이 주고받다 보니 그와 접점이 있다는 사실도 조금씩 드러났다. 나도 그렇다고 자부하지만, 그도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멍통은 아니었다. 여전히 기본 관점은 달랐지만, 국내 정치 문제에서 수렴하는 것들이 있었다. 상대 세력 공격으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쟁 정치, 세상의 복잡성을 이념과 당파성으로 환원하는 단순성을 모두 싫어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우리 자신을 자주 발견하고는 했다. 어느 때부터인지 내가 신문 칼럼에서 쓰는 국내 정치 논평에 관해 그가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때가 많았다. 아, 물론 다른 기사를 두고 나에게 따지는 일은 여전했다.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지만, 그가 알면서도 내게 가타부타한다는 점도 내가 알지만, <류길재 라디오>의 유일한 고정 청취자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날선 비판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고 피 흘려야 했다.

나는 그를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신문사에서 외교·안보 문제도 담당하면서 그의 분야와 겹쳐졌다. 신문사에 다니느라 대학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던 나는 그가 이미 저명 학자로 이름을 날릴 즈음 뒤늦게 휴직한 뒤 북한 정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때문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섰는데도 마주치는 일이 종종 생겼다. 2006년 10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재와 마주쳤다. “아, 네 칼럼, 그건 아냐!” 그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직후 나는 이런 요지의 칼럼을 썼다.

북한에 대해 퍼주기, 봐주기, 묵인하기, 무조건 감싸주기를 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핵실험을 불러왔다고 한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무죄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책임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포용정책 때문에 핵실험을 한 게 아니라 포용정책을 하지 않아서 핵실험을 했다. 포용정책은 운명이다. 그것은 우리가 옷을 고르듯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일부이다.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 봉쇄하고, 굶겨 죽이고, 압박하고 폭격할 수 없다.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를 제앙으로 몰고 가는 거대한 핵폭탄이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평화 공존의 날까지 깊어지고 가야할 집이다. 무겁다고 내려놓을 수 없는 집이다. 북한의 기아, 위기, 고통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우리 마음 구석에서 꿈틀거리는 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포용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정책의 포로이다. 바꿀 것도 수정할 것도 재검토할 것도 없다.¹⁾

당시 보수 야당은 포용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 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포용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집권세력 내에서도 포용정책 수정론이 제기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정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첫 핵실험이 남한 사회에 가한 충격은 컸다.

길재는 칼럼에 대해 한마디 던졌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내 정치 문제와 달리 북한 문제에 관한 한 그와 나 사이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는 나의 학문적 선배였다. 나는 그의 논문을 통해 많이

1) 이대근, “포용정책은 유죄인가,” 『경향신문』, 2006년 10월 12일.

배웠다. 하지만 현실의 정책, 대북정책을 취재하고 기사 쓰고 논평하는 것은 나의 오랜 직업적 활동이었다. 우리는 서로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 그의 선공에도 나는 뭐가 문제인데라고 따지지 않았다. 당시 여론에 맞장뜨겠다는 결기로 감정을 잔뜩 실어서 쓴, 격문 같은 칼럼에 길재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았다. 요즘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때는 그 말을 놓고 대립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핵’과 ‘포용’이란 상극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누군가를 이해시키려 한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다.

2. 북한 변화의 한계를 주장했던 학자의 통일부 장관직 수행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외부 세계가, 특히 남쪽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게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 때문이니 뭐니 하지만, 다 허구야. 북한이 스스로 변하면 되는 거야.”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수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옹호하는 논리 같기도 하고, 진보 정부의 화해 정책을 무용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기도 했다. 북한이 불안해하는 것을 외부세계가 해소해 주면 세계를 향해 나올 것이라 나는 믿었다.

그랬던 그가 역설적이게도 통일부 장관이 되었다. 지금이나 그때나 대북 정책 결정권이 통일부 장관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두고 평가받아야 하는 자리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가 장관이 됐다는 것은 드디어 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이

기도 했다. 그동안은 내가 북한 공부를 하면서 그의 영역에 발을 들여 놓고 그의 도움도 받았다. 이제 길재는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나는 이미 그의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의 지면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만큼 내가 그를 도와 줄 방법은 없었다. 그는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었다. 지면에 그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갈 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몇 개월 뒤 나는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남의 손을 빌릴 것도 없이 내 손으로 직접 통일 정책을 시비하고 찌르는 검객의 역할을 했다. 나는 사설에서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칼럼에서도 그랬다. 2014년 10월 칼럼의 요지다.

박 대통령 취임사부터 유엔총회 연설까지 북한 문제를 거론한 공식 연설문은 20건이다. 그는 이들 연설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경제난·탈북자·도발·핵 및 경제 병진노선같이 민감성 높은 북한 문제를 꼭 짚어 비판했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박 대통령은 예외다. 그가 석 달 동안 참은 적이 있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대북 비판을 했다. 지난 3월의 경우 3·1절에 비판했는데 이틀 뒤 다시 하고 사흘 뒤 또 했다. 작년 5월에는 7, 8, 9일 사흘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판했다. 북한은 비판받을 만하다. 그렇다 해도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찌르고, 찌른 데 또 찌르기를 19개월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²⁾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느닷없이 ‘통일 대박’을 주장하더니 통일

2) 이대근, “박대통령의 북한 가슴 찌르기와 표현의 자유,” 『경향신문』, 2014년 10월 2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남북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북핵문제를 보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거론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은? 없다. 남북 관계? 끊겼다.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은? 중단됐다. 금강산관광은? 6년째 막혀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딱 한 번 했다.³⁾

이 글에 잘 묻어나는 감정이지만 나는 그때 꽤 화나 있었다. 길재가 혹시 전화를 걸어 해명이라도 하면 제대로 반박할 참이었다. ‘이젠 공수(攻守) 자리를 바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길재는 해명하거나 변명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장관 그 따위로 하려면 때려 치워라’ 이렇게 복수할 기회를 나는 놓쳐 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실 그는 비판받을 자격도 없었다.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며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걸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주무 장관이면서 뒤처리만 맡아야 했다.⁴⁾ 물론 그 사실을 그때 알았다 해도 나는 ‘허수아비 장관 그만두라’고 했겠지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이런저런 자리에서 하는 발언을 통해 장관 재직 시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내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매섭게 공격할 때도 그는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장관 재직 때는 각자 위치와 역할이 있어서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퇴임

3) 이대근, “통일 준비인가, 현실도피인가,” 『경향신문』, 2014년 8월 21일.

4) 정인환, “류길재 전 통일장관, 통일 대박론 전혀 몰랐다,” 『한겨레 신문』, 2017년 2월 10일.

이후에도 침묵한 것은 내 의견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의 성격상 나와 한바탕 논쟁을 했을 것이다.

길재가 나중에 장관직의 무력감을 토로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를 속 시원히 혼내지 못했다고 후회한 일을 후회했다. 아마 그랬다면, 그에게 스트레스만 더 안겨 주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 애를 쓴 장관으로 기억되고 있다. 남북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을 대북 특사로 보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좌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사과한 유일한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길재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다. 그는 집단사고에 빠지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 아니다. 그랬기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아는 대로 행동했다.

나는 길재의 견해대로 대북정책에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2018년, 20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 단지 폐쇄에서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비핵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조건을 더 완화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북한은 신뢰가 결여된 상황이므로 비핵화 중간 단계에서 주고받기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다음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양자 간 ‘신뢰 결여’에 동의하지만, 불신의 원인, 불신 해소 방법이 달랐고 그 때문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미 협상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다. 그렇다면, 먼저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했다. 영변 핵 단지 폐쇄는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비핵화 자체는 아니다. 북한은 비핵

화의 최종 상태, 완전한 핵 폐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밝혀야 했다.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더 매력적인 제안, 즉 조건부 제재 해제(일명 Snapback 조항 도입)을 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비핵화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세계의 유인책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인책만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는 없다. 비핵화를 결심하는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

반면, 길재는 대북정책이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한의 역할을 인정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장관 때 대화를 통해 북한을 평화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대화 복원을 위해 그토록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허구한 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대통령 밑에서 그가 얼마나 속을 태웠고, 얼마나 분투했을지 눈에 선하다.

지나고 보면, 길재와 나 사이의 북한 문제 인식의 차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다소 좁혀졌던 같다. 물론 모든 북한 문제에서 의견이 접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이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에 어느 것이 유용한가 하는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런 점에서 길재와 의견이 같다고 생각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간에도 차이와 상관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까? 개인 간 차이와 정치세력 간 차이는 그 무게가 다르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진보와 보수 모두 북한 문제를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

에도 대북정책에서 남남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차이는 불가피하다. 정치 경쟁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차이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차이는 쓸모 있다. 그러나 차이를 대결과 갈등의 불쏘시개로 쓰 고자 하면, 차이는 합의를 다 태워 버린다. 그건 차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차이가 아니라, 차이를 다루는 방법이다. 북한 문제 인식이나 대북정책에서 여야, 진보와 보수 간 합의의 기반이 넓고, 차이가 작다고 해도 상호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와 보수 간 차이는 줄었다. 보수 정치세력은 시민 다수의 의사를 따르는 방향으로 혁신하고 성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보수 야당의 지지율도 많이 회복되었다. 서울에서는 보수 야당의 지지율이 집권당을 앞서기도 했다. 전통적인 강경 보수 입장을 완화하고 중도 혹은 중도 보수의 노선으로 전환하려 애쓴 결과이다.

이렇게 차이는 작아졌지만 작아진 만큼 여야 간, 진보·보수 간 대결과 갈등이 완화된 것 같지는 않다. 대결 정치는 변함없다. 차이가 줄수록 야당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차별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그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잦아들기는커녕 더 심화되었고, 더 치열해졌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2월 24일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저지를 위한 농성을 한 바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한 김영철 일행의 방남은 남북 대화와 화해의 창을 여는 계기가 되었지만, 남남갈등까지 완화하지는 못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38년 히틀러의 위장 평화 공세와 같다”면

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간 회담과 합의를 줄곧 ‘위장 평화 쇼’라고 비판했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이 나왔을 때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버렸다”며 “(대북)정찰에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 버리는 합의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핵화 조치에서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을 통합해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한 2020년에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월 14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이후 미래통합당은 총선 패배를 계기로 다시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했지만, 서해상의 월북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정부 대응을 강력히 비난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보수 야당은 전례 없는 남북화해와 비핵화의 기회가 열렸을 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및 남북관계가 단절됐을 때를 가리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대외 공세를 중단한 적이 없다. 야당으로서 집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지나친 일이다.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집권세력의 책임도 있다.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차 버렸다. 야당을 ‘적폐세력’이라며 적대시할 뿐 동반자로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까지 대북정책을 제시한 ‘국가안보전략’을 비교해 보면 여야는 협력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여야가 대북정책에 관해 협치를 못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3. 대동소이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은 대선 공약과 집권 후 미세 조정된 공약을 정리해 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집권 초기 발간한다.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안보의 비전과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로 상술하는, 비슷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힌 목표는 이렇다. “남북기본 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나아가 남북협력의 심화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교류협력의 성과가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모든 갈등과 현안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신뢰 우선 원칙과 호혜주의를 추구한다. 셋째, 모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넷째,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 되도록 한다.”⁵⁾

이명박 정부의 목표를 보자.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다짐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남북한 관계는 이념이나 정략적 잣대가 아닌 진솔함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서로에게 진정 도움을 주는 미래지향적 남북관계가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⁶⁾

5) 국가안보실,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번영과 국가안보』(2004), 22~24쪽.

6)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 국가”(2009), 16쪽.

박근혜 정부의 목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시대를 준비해 가고자 한다. 우선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을 적극적으로 이룩해 나가고자 한다.”⁷⁾

문재인 정부의 목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세 축 사이의 상호 추동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남북 간 다방면의 교류 협력 활성화와 합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되는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는 토대를 구축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국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할 것이다.”⁸⁾

4개 정부 모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동일한 목표를 제시했다. 북핵 해법도 차별성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북핵 해결 3원칙으로 제시했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포괄적 해결을 추구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여 더 이상 북한 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천명하고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대화

7)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2014), 15쪽.

8)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2018), 25쪽.

를 통한 문제 해결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의 장을 활용하여 북한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 재건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상호 군사력의 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⁹⁾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 “북한 핵 문제는 세계 핵 비확산체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 정권의 인식 변화이다.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인하는 길만이 북한 스스로도 살고 한민족 전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비핵 및 개방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¹⁰⁾ “6자 회담을 통한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 검증, 폐기 과정을 진전시킬 것이다.”¹¹⁾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정책.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실효적인 대북 압박과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¹²⁾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안보목표로 설정하

9)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33~34쪽.

10)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 국가,” 16쪽.

11) 위의 글, 17쪽.

12)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58쪽.

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과 접촉면을 확대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발신해왔다. 정부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대화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원칙 하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¹³⁾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전쟁 불용, 한미 공조에 의한 한국 주도적 역할, 비핵화와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 관련국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통한 북한 설득이다.¹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북핵 불용, 북한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진보와 보수 간 차이가 없다.

이번에는 남북관계에 관한 입장을 보자.

노무현 정부. “현 단계에서 정부는 남북 간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¹⁵⁾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¹⁶⁾ 이명박 정부. “북한경제가 성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면 이는 곧 남북

13)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37~38쪽.

14) 위의 책, 38~39쪽.

15)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35쪽.

16) 위의 책, 36쪽.

한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가 될 것이다. 활력이 넘치는 남북한 경제교류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자본과 기술이 한반도에 넘쳐흐르도록 하여 한민족의 번영공동체를 가꾸어나갈 수 있다.”¹⁷⁾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실시하되 분배의 투명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¹⁸⁾ 이명박 정부는 북핵과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핵 위협을 거두지 않는 한 남북한 간에 진정한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¹⁹⁾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밝혔다. “북핵 문제의 가시적인 진전과 더불어 개성공단, 관광 사업 등 이제까지 지속되어 온 남북협력 사업을 내실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²⁰⁾ “국제협력 속에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꾀함과 아울러 남북한 간 경제 사회 문화협력을 심화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도 적극 추구해 나갈 것이다.”²¹⁾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입장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남북간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이행하면서 대화와 합의 이행을 제도화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자 한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교류협력도 적극 모색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될

17)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 국가,” 17쪽.

18) 위의 글, 19쪽.

19) 위의 글, 17쪽.

20) 위의 글, 18쪽.

21)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17쪽.

경우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본격적인 대북 경제 협력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안보에만 매몰되어 대화의 가능성을 받아버리거나 남북관계만을 중시하고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대북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통일정책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²²⁾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의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정착 시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전쟁 재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붕괴 혹은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며,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구상하며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성을 갖고 추진한다.”²³⁾

정부마다 특별히 선호하는 용어, 정세의 차이에 따른 강론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한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좋은 예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인 남북회담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갈 것”²⁴⁾이라며 남북회담 대표의 직급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목표, 전략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들이다. 모든 정부가 남북대화와의 한미 공조를 통한 평화적 비핵화, 북핵 문제 진전에 따른 획기적인

22)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19~20쪽.

23) 위의 책, 28쪽.

24)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61쪽.

남북경제, 안보와 남북관계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정치 상황과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각 정부가 공표한 대북정책은 일관성 쌍생아처럼 구별하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진보·보수 간 정권 교체를 하면서 대북정책 뒤집기가 반복되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 없다. 국가안보전략을 기준으로 하면 대북정책의 기조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폐기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

4. 대북정책 일관성 흔드는 당파적 대결의 정치

대북정책이 정권마다 변경된다는 인식은 대북정책의 기조, 방향과는 무관한, 당면 사건과 현안을 둘러싼 대응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의 연평도 해전, 노무현 정부 때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명박 정부 때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박근혜 정부 때의 남북회담 대표 직급 논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재인 정부 때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각 정부에서 남북 간에 많은 사건과 현안이 불거졌다. 차이가 있다면, 진보 성향의 정부는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여 자세를 유지하려 했고, 보수 성향의 정부는 그런 사건 때문에 대북 관계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현실은 사건 대응 방식의 차이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말하자면, 정권 교체 때마다 교체되는 것은 대북정책 자체가 아닌, 당면 사건과 현안에 대한 정부 구속성 정도의 차이이다.

사건에 종속된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정부이다. 같은 보수정부가지만,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건에 매몰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짧은 외교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건 따라가기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남북 고위급 접촉, 대북 확산기 방송,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전승절 참석, 시진핑과의 통화 실패와 같이 맥락이 다른 사건들을 따라 좌회전·우회전을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상대와 티격태격하다 감정 대립을 하고 결국, 그것이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돌발 현안을 따라 흘러가다 달도 기운 어두운 밤 어느 골짜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눈앞의 일을 좇는 임기응변 외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결가지 외교, 셋길로 빠지다 '길 잃는 외교'로 끝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평화의 비전과 전략이 실제 외교·안보의 실천적 지침이라고 생각했다면 도중에 길을 잃더라도 그걸 나침반 삼아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일회용 걸치레나 정권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길을 가는 도중 버렸다면 돌아갈 수 없다.²⁵⁾

당면 사건과 현안을 따라가다 길을 잃고, 그로 인해 정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사건 대응 방식 외에 국내 정치 문제, 즉 정치적 양극화가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두 개의 서로 구별되는 이념, 정책, 쟁점을 둘러싸고 정당, 지지자, 유권자가 점점 없이 당파적 대립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상대 진영과 중첩되는 공간이 적은 당파적 대결 상황에서는 지지층만을 만족시키는 정치 전략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25) 이대근, “박근혜는 어떻게 길을 잃었나,”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느끼지 못하고, 작은 차이로도 크게 갈등하도록 만든다. 이런 정치 구조에서 정치적 갈등은 정치적 이익을 안겨 주고, 타협은 정치적 손실로 되돌려 준다. 당파적 대립 상황에서는 사실 당파 간 입장 차이의 크고 작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객관적 차이보다 심리적 차이가 현실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대북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보수세력은 국내정치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보수세력은 탄핵 이후 새로운 정체성 정립이라는 과제가 난관에 부딪히자 자주 ‘북한’을 소환하고 있다. ‘친북 대 반북’의 이념적 차이로 보수야당의 정체성을 손쉽게 재건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합의된 대북 접근을 할 수 없다. 역대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내세웠지만, 어느 정부도 실행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당파적 대결은 공존할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정당, 국회가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와 같은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이 무엇을 합의하는지도 성찰해야 한다. 그것은 야당 배제, 국회 우회의 혐의를 받기 쉽다. 집권자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동원해 정책을 집행하는 포퓰리즘의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을 하겠다면서 ‘통일 국민협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치가 아닌, 대결 정치를 한 결과이다. 집권세력은 종종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다. 초당 협력은 흔히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협력하지 않는 야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질되고는 했다. 보수 야당은 보수 야당대로 외교·안보, 통일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자기 정체

성과 이념을 과시하고, 여당을 공격하기에 이만한 재료도 없다. 한국에서 외교·안보, 통일이라는 마당은 협력의 장이 아니라, 당파적 대결의 장으로 더욱 쓸모가 있다. 집권세력이 진정 초당적 협력을 원한다면 초당적 태도, 즉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사전 사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 내부 여야, 진보 보수 간 차이가 크다 한들 남북 간 차이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세력이 대북정책의 성과를 독점하려 하는 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북정책의 성과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5년짜리 정책 브랜드도 포기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와 번영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으로 교체되었고, 이는 다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바뀌고,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대체되었다. 이 같은 5년 주기 브랜드 교체로 인해 실제와 달리 정부마다 기존 대북정책의 폐기를 반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정 정부가 자기 고유 브랜드를 만든다면, 다음 정부가 이를 계승할 까닭이 없다. 브랜드가 굳이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 공동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를 유보한 채 관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도발도 자제하지만, 대화의 장애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2020년은 관망의 시기였다. 2021년에도 그럴까? 미국에는 바이든 신정부가 들어오고, 남한에는 20대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비핵화 협상의 재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섬세하고 단합된 행동이 절실한, 관건적 시기이다. 비핵화는 김정은이 결단할 사항

이지만, 관련 당사자들 간 협력을 통해 북한과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가 결단하도록 촉진하는 공동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국내 정치세력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요한 당사자이다. 만약,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정책에 관한 여야 간 합의가 존재한다면, 김정은이 정권 변화의 틈새를 활용하거나 정권교체에 따른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비핵화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 토론하고 싶은 이가 길재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넌 말이 없구나! 그렇다. 멀리 떠난 친구여.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2018).

_____,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2014).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변영과 국가안보』(2004).

2) 신문

이대근, “박근혜는 어떻게 길을 잃었나,”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_____, “박대통령의 북한 가슴 찌르기와 표현의 자유,” 『경향신문』, 2014년 10월 2일.

_____, “통일 준비인가, 현실도피인가,” 『경향신문』, 2014년 8월 21일.

_____, “포용정책은 유죄인가,” 『경향신문』, 2006년 10월 12일.

정인환, “류길재 전 통일장관, 통일 대박론 전혀 몰랐다,” 『한겨레신문』, 2017년 2월 10일.

3) 기타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 국가”(2009).

North Korea, Kihl-jae and I

Yi, Dae-keun (Woosuk University)

The late Ryoo Kihl-jae, a moderate conservativ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I had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issues. That's why we often argued, but we could share views on that which is practical to solve North Korean problems while respecting the differences between us. Sharing each other's opinions is also possible between South Korea's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For a long tim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in Korea have been at odds over North Korea policy, but that is not inevitable. There is ample reason to cooperate. This is because their conflict is not just caused by one factor – that is, the differences. Rather, the problem is not the differences, but the way in which differences are dealt with. After the defeat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have eased their hard-line conservative stance,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Nevertheless, confrontation and conflict remain over the North Korean issue. Regard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including the inter-Korean summit, the conservative opposition party launched an intensive attack on the ruling camp, calling it a disguised peace show.

However,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e conflict when comparing each of the last four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includes th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tance. The content is much the same. Nevertheles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iggest reason wh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at odds is domestic political issues, rather than the difference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or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issues.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is not caused by the North Korea policy itself, but by the accumulation of differences in response to accidental inciden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what causes the difference in response is domestic confrontational politics. In a word domestic political forces are mobilizing North Korean issues for political competition. Therefore, if the domestic parties cooperates,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will have a common approach to North Korea-related problems, includ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oing so will ensure th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North Korea policy.

Keywords: Ryoo Kihl-jae, national security strategy,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onflict, differences in North Korea Policy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ooperation, conflict politics